

평화당 후보 확정... 본격 텃밭 민심 공략

오늘 광주서 선대위 회의·연구원 창립토론회

지도부 등 총출동... 외부전문가 초청 전략 모색

민주평화당이 광주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를 열고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라인업을 대부분 확정하는 등 텃밭인 호남에서 민심 행거기에 나선다.

1일 민주평화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광주를 찾아 중앙선대위 회의와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배숙 대표를 비롯해 김경진 상임선대위위원장, 장병만 원내대표, 정

동영 인재영입위원장, 천정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일 최고위원, 정인화 사무총장, 박주현 선대위 정책전략 본부장, 이상돈 민주평화연구원 원장, 이용주 전남도당 위원장, 최경환 광주시장 위원장,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는 민주평화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평화연구원 창

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한다.

창립 토론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전국적 차원과 호남 차원의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상돈 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화당은 최근 공천심사를 통해 광주지역 5개구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4곳에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동구는 현직 김성환 정장을, 서구는 이성일 전 호남매일 사장, 북구는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후

반기 의장, 광산구는 이정현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에는 동구1 홍두서, 동구2 이재임, 남구2 김애정, 북구3 김재찬, 북구6 허석진 후보를 공천했다. 기초의원도 동구가 홍기일, 서구 가 김수영, 서구 나 오광록 등 10여명으로 진영을 구축했다.

전남은 영암군수 후보에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직무대리를 공천하는 등 기초단체장 13명, 광역의원 32명, 기초의원 86명 등 총 131명을 확정했다. 신안군수 후보는 고길호 신안군수와 정연선 전 전남도의원의 경선으로 결정되며,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1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에게...” 노대통령 생전 뜻대로 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을 시민들이 찾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이 생전 “이 집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집”이라고 한 데 따라 자택을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봉하마을 ‘지붕 낮은 집’ 열리다

노무현 전대통령 유지따라 시민 개방... 첫날부터 ‘복적’

“느리게 살고, 적게 쓰고, 부끄럼 타는 지붕 낮은 집”

퇴임 후 귀향을 결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 기분 좋다”며 돌아와 짧은 세월 지냈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의 집’이 1일 활짝 문을 열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첫 시민 방문객을 맞는 것으로 시작으로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집을 개방한다. 2년 전 잠시 특별개방한 적이 있지만 이전 매주 월·화요일과 설·추석, 매년 노 전 대통령 기일을 제외하면 매일 개방한다. 생전 ‘이 집은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집’이라고 했던 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재단 측은 일반인에 정식 개방하기 1시간 전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사저 개방행사를 마련했다. 언론인 개방행사를 마친 직후 11시가 되자 정식 개방 첫 방문객이 된 시민 25명이 대통령의 집에 들어섰다. 신기한 듯 조심스럽게 정원과 서재, 안채, 사랑채 등을 둘러본 방문객들은 가끔 질문을 던지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재단은 애초 지난 1월부터 공개 하려고 했다가 주택을 전사관으로 바꾸고 장애인 편의시설, 통로 확장 등 공사다행정저리에 시간이 걸려 추도식이 열리는 5월 초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포털 기사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한국당,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 금지 등 규제법 잇따라 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포털사가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도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드루킹 방지법 2탄’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게재를 매개하는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노동정책 엇갈린 목소리

128주년 노동절...與 “추경 필요” vs 한국당 “퍼주기 안돼”

여야는 128주년 노동절인 1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야당이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남아 있는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청년 실업률은 11.6%로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기주의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

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성정의 변곡점마다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로 기록된 역사”라며 “노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호되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확산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적폐 청산,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춧발력 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고용정책에 대한 전면적 쇄신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 삼성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너무 많다”며 “사력을 다해 노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일부 지도부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엔 대북제재 무관한 사업부터 착수”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남북회담 후속작업 차질없이 이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판문점 선언” 후속 사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

적으로 드러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극적인 해방을 세계에 감동적으로 알렸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미정상회담과도 관련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의제별 구체성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초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제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뀌어 상당 기간 활

동하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까지를 종합해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내각은 이행추진위와 협력해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필요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준비되는 대로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축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제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6200만원
H. 010-6838-1230

